

김병준 부총리 사의

배경과 향후 정국

힘 빠진 盧... 레임덕 앞당겨질 듯

정국을 뜨겁게 달구었던 김병준 부총리의 거취 문제가 결국 자신 사퇴로 매듭지어졌다.

그러나 이번 김병준 부총리 사퇴 논란은 당·정·청간의 불협화음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국정운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등 후유증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당장 후임 법무장관 임명과 관련해 주목되는 부분이다.

특히 인사권의 타격은 집권후반기 레임덕으로 이어질 공산이 있다. 그 과정에서 참여정부가 수행해온 개혁정책도 수정 가능성이 제기된다.

▷사퇴 배경=지난 1일 "사퇴는 무슨 사퇴냐"며 버티기를 시도하던 김 부총리가 불과 하루 만에 돌연 사퇴한 배경은 임명권자인 노무현 대통령과 청와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청와대는 국회 교육위원회 회의 이후 "사퇴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힘을 실어주는 기류를 보이기도 했지만 김 부총리로서는 자신의 문제가 당·청 관계가 악화되고 국정 운영에 부담이 돼서는 안 된다는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김 부총리가 이날 사의표명 보도자료에서 "대통령께서 국정을 운영하는데 부담이 되고 싶지 않고 대국회관계와 당·청 관계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고 밝힌 것은 이를 뒷받침해준다.

여기에 한명숙 총리와 여론 내의 강경 기류도 김 부총리의 사퇴 결심을 재촉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동안 극도로 신중한 발언을 해온 김 근태 의장은 2일 "명예로운 자진사퇴 결단을 촉구한다"며 더욱 목소리를 높였고,

정치·교육계 등 전방위 압박 버티기 한계 당청 갈등 표면화...개혁정책 후퇴 가능성

이날 오후로 예정됐던 교육 당정회의도 당 측의 요구로 취소됐다.

한명숙 총리도 교육위 직후 입장 발표 방침을 연기하면서까지 김 부총리의 결단을 종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기에 한나라당을 포함한 야 4당의 해임건의 추진 움직임과 함께 부정적 여론이

개선되지 않은 점도 김 부총리에 부담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치권에서는 김 부총리가 이미 전날 국회 교육위 회의 전에 사퇴 결심을 굳혔으나 각종 의혹에 대한 해명을 위해 사퇴 발표를 하루 늦춘 측면이 크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취임 13일만에 사의를 표명한 김병준 교육부총리가 2일 점심시간에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당 관계자는 "김 부총리로서는 일말의 '회망'을 갖고 여론의 경과를 지켜봤을 것"이라며 "그러나 민심은 물론 '우군'이 돼야 할 여론의 분위기가 여전히 부정적이라는 것을 확인하고는 결심을 내렸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향후 정국 전망=노무현 정부의 핵심 실세로 그 동안 참여정부의 각종 개혁 정책을 주도했던 김병준 교육부총리가 2일 불명예 퇴진함으로써 노 대통령은 향후 국정운영에 적잖은 부담을 안게 될 전망이다.

특히 철학과 이념을 공유하는 인사들을 전면에 배치, 개혁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려던 노 대통령의 임기 후반기 구상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국정 장악력이 약화되고 집권 후반기 레임덕을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

특히 열린우리당이 청와대에 맞서 '사퇴 불가피' 당론을 고수하며 끝내 김 부총리의 낙마를 관철, 향후 인사권을 둘러싸고 당청 갈등이 표면화될 공산도 크다.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김 부총리가 사퇴를 결심하기까지 우리당의 '단단히 압박'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며 "향후 당·청 관계에서도 당이 정국 주도능력을 갖춰 발언권을 더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당장 다음주 단행될 예정인 법무장관 인선을 앞두고 노 대통령 인사방식에 일정 부분 변화가 있을지 여부가 관심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노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 국정 운영 기조와 우리당 입장을 고려한다면 또다시 '코드 인사'를 강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점점의 장치' 갖추면 뭐하나

또 도마위에 오른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

김병준 교육부총리의 중도하차를 계기로 참여정부의 인사검증시스템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검증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어느 직위보다 엄격한 도덕성을 요구하는 교육부총리 인사과정에서 논문 의혹 문제가 걸려졌을 것이고, 이같은 '대형사고'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는 지적이다.

이번 사안은 특히 청와대가 새로운 인사검증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부적격자를 필터링하기 위한 겹겹의 장치를 갖춘 상황에서 빚어져 청와대가 체감하는 부담감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해 초 이기준 교육부총리를 시작으로, 이현재 경제부총리, 최영도 국가인권위원장, 강동석 건교부 장관 등 고위 공직자들이 부동산투기 문제 등으로 줄줄이 낙마한 것을 전후해 검증시스템 보완에 박차를 가해 선진화된 검증시스템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아왔기 때문이다.

우선 청와대 내부에 각계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자문회의'를 설치했고, 인사검증시스템을 법제화해 검증 대상에 고위공직 후보자 뿐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을 포함시켰다.

또한 국회 인사청문회 범위를 전 국무위원으로 확대함으로써 올해부터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차원의 검증이 이뤄지도록 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윤초 검찰 고위 인사에서 2명의 검사장 후보가 재산형성과정과 준법성의 문제점이 발견돼 탈락하는 등 소기의 성과가 나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사태가 말해주듯 청와대의 새 검증시스템도 근본적 한계를 갖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 후보자의 친인척 등 극소수만 알고 있는 사생활 문제가 논문 해석 등 검증과정에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학술 문제 같은 경우 후보자 주변인사의 제보가 없으면 접근이 어렵다는 데 맹점이 있다.

김 부총리의 논문 논란 역시 그가 참여정부 출범 이후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장과 청와대 정책실장을 거치면서 단 한번도 문체계가 없었다는 점에서 학계 내부의 제보에 의해 불거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문화지체' 현상도 인사검증의 환경적 허점으로 거론된다. 사회지도층이 여전히 관행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인데도 국민들은 미국 등 선진국 수준의 무한한 도덕적 무장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

정부 관계자는 "지적재산 문제의 경우 학자나 언론이나 과연 우리사회 어느 곳이 떳떳하다고 말할 수 있겠냐"며 "김 부총리에게 요구되는 기준이라면 이제는 50~60대는 물론이고 40대 소장학자 가운데서도 장관할 만한 사람이 없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해명 명석만 깔아줬다"

한나라 사퇴압박 대응방식 지도부 비판론

한나라당내에서 논문표명 의혹 등으로 사퇴한 김병준 교육부총리에 대한 사퇴압박 대응방식을 둘러싸고 당 지도부에 대한 비판론이 대두되고 있다.

김 부총리가 2일 사퇴 결단을 내리기는 했지만, 한나라당 지도부는 그동안 변변한 전략 없이 정부·여당에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였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1일 국회 교육위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제대로 준비도 없이 언론보도만을 근거로 김 부총리를 추궁하다가 되레 해명의 기회만 제공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원내대표단에서 활동했던 초선 의원은 "김영오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너무 안이하게 대처했다"며 "오려려 여당 의원들이 준비를 더 철저히 한 것 같았다"고 지적했다.

당 인터넷 홈페이지와 일부 교육위원들의 홈페이지에도 준비소홀에 대한 따가운 지적이 이어졌다.

당 홈페이지에는 "교육위의 한나라당의 원을 수준은 한심한 유치원생 수준이었다.

이런 수준으로 접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ID : dj7460)", "도대체 어느 당이 여당이고 야당인지 헷갈린다(asungsil)"란 글들이 쏟아졌다.

교육위를 열어 김 부총리에게 해명의 '명석'을 깔아준 자체가 잘못됐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당은 김 부총리가 지난 달 30일 청문회 개최를 요구한 데 대해 반대입장을 밝혔으면서도 정작 교육위 소집에는 응하는 바람에 사실상 청문회 요구를 수용하는 전략적 실수를 범했다는 것.

강재섭 대표는 오전 열창동 당사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원내전략이 잘못됐다"며 김 원내대표를 질타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대표는 "김 부총리가 청문회 개최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위를 연 것은 사실상 그 요구를 수용해 준 것"이라며 "사정변경이 생겼는데도 교육위를 연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한 참석자가 전했다. /최진만기자 man21@kwangju.co.kr

사의표명까지 숨가땀던 3시간

김병준 부총리의 2일 오전 사의 표명은 취임 이후 10여일 간 이어졌던 지리한 의혹제기와 공방전에 비해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김 부총리가 이날 오전 7시경 청와대로 들어가 노무현 대통령을 만나 사의를 표명한 순간부터 오전 10시10분경 교육부 기획홍보관리관을 통해 사의를 발표하기까지는 3시간 남짓에 불과했지만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주변은 평행한 긴장이 감돌았다.

김 부총리는 이날 이른 아침 휴가 중인 노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청와대로 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노 대통령에게 그동안 자신을 돌

金부총리 만난 盧대통령 "..." 한명숙총리 "결단에 감사"

러한 의혹이 대부분 해소됐고 대통령의 국정운영과 국회관계, 당청관계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는 사의를 표명했다. 고통을 당한 가족과 함께 당분간 쉬고 싶다는 뜻도 전했다.

노 대통령은 김 부총리의 사의 표명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총리는 이어 오전 7시30분 한명숙 총리 주재로 정부 정책현안 조정회의가 예정된 세종로 종합청사로 향했다.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회의장으로 향하는 김 부총리의 표정은 활일을 다한 듯 출가분하고 의외로 밝은 표정이었다. 곧 이어 한 총리가 짧은 인사를 마친 뒤 회의가 진행됐다.

전날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조목조목 때로는 공세적으로 해명에 나섰던 그였기에 이 때까지만 해도 어느 누구도 사의 표명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다.

총리 주재 회의가 의외로 길어지면서 한 총리와 김 부총리가 거취 문제를 놓고

단독면담을 하는 것 아니냐는 소리가 흘러나왔다. 김 부총리는 회의가 끝난 뒤 한 총리와 권오규 경제부총리, 김영주 국무조정실장 등과 따로 만나 차를 마셨고 이 자리에서 대통령과의 면담과 사의 표명 사실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리는 김 부총리의 결단에 감사를 표했고, 다른 국무위원들도 그동안의 심적 고통을 위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를 마친 뒤 청사 16층 집무실로 돌아온 김 부총리는 측근들에게 사의표명 사실을 알리고 기획홍보관리관을 통해 사의표명 사실을 발표하도록 했다.

마지막 실국장 회의를 끝낸 김 부총리는 정오를 조금 넘어 13일 동안 몸담았던 집무실을 나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기미, 검은반점치료에

도미나크림은 치료를 위한 의약품입니다.

도미나 크림은 기미, 주근깨, 노인성 검은반점등, 피부에 과도하게 침착된 멜라닌색소를 효과적으로 억제, 개선시켜 주는 치료를 위한 의약품입니다.

도미나크림은 초저해독 히드로퀴논(주성분)에 17종의 크림기제를 복합적으로 배합시킨 약용크림으로써, 자외선에 의해 피부 부위에 침착된 멜라닌색소의 생성을 억제하여 기미, 주근깨, 노인성 검은 반점의 원인인 색소침착 현상을 깔끔하게 개선, 치료하여 줍니다.

치료를 위한 약용크림

도미나 크림

▶ 하루 1번, 저녁에 바르세요
▶ 화장실에서 구입하세요



탈모증 치료제 모바린

일반 의약품으로 약국에서 직접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